



전북발전연구원

열린뉴스

CONTENTS

- 1 신청사 시대의 패러다임
- 2 전북 미래 비전 전략과 'NOW 전북'
- 3 공공기관 이전발표와 전북
- 4 전북의 과학기술진흥과 과학기술자문위원 활용사업
- 5 지속가능한 전북발전 패러다임
- 6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쉽 없는 전진을 위하여
- 7 주5일 근무제와 전북의 F-Tour Project
- 8 연구원 동정

J E O N B U K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신청사 시대의 패러다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2005년 7월 1일, 전라북도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다. 지난 반세기, 영욕이 교차했던 중앙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효자동 신청사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한 때 전라북도는 문전옥답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예술과 문화, 맛깔스런 음식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산업화의 파도를 타지 못한 채 멈칫거리다가 250만이었던 인구가 이제 180만을 사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업화의 과실을 공유하지 못한 억울함과 분노는 국민의 정부를 거쳐 압도적 지지로 탄생시킨 참여정부에 이르러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표출되고 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많은 사람들이 전라북도를 떠나거나 언제든 떠나고 싶어 한다.

새만금 사업과 김제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몇 년 째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게다가 얼마 전에 보도된 S-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서남해안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언제까지 전북은 찬밥 신세가 되어야 하는 한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전북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신감은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때, 도청사 이전으로 인한 상징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심기일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전라북도가 브랜드 슬로건으로 채택한 'NOW Jeonbuk'이라는 말처럼 전북은 이제 지난 시대의 가난과 소외의 어두운 기억을 떨치고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종언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을 발굴·육성시킴으로써 도약의 발판을 삼을 기회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

도약을 위한 조건도 갖추어져 있다. 첫째, 기업유치에 있어서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가격이 싸고 자연재해가 적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 공장용지를 구입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둘째, 그동안 산업화로부터의 소외의 역사는 반대급부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선물로 남겨 주었다. 청정한 자연은 문화·관광·영상 산업의 든든한 토대가 된다. 셋째, 전북은 타지역에 비해 뛰어난 음식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은 웰빙 시대의 첨병이다. 동시에 생물·생명공학 산업과 연결되는 좋은 토양이다. 넷째, 새만금은 아직 미지의 땅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고, 새만금항을 통한 '물류전북'의 실현도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시련이 많았지만 이것들은 전북 발전의 지렛대로 활용되도록 때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 개발시대의 우리 국민은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졌었다. 잘 살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삶의 수준이 업그레이드된 지금, 전북은 지난 시대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패배주의와의 과감한 결별을 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자.

서곡지구에서 울려 퍼진 신청사 개청 기념 '열린 음악회'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전북발전의 진정한 서곡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여성정책연구소장 전 정 희



전북발전연구원 열린뉴스
2005년 7월 통권 제2호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5년 7월 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http://www.jd.re.kr>
TEL.(063)276-2060
FAX.(063)276-2069

전북미래 비전 전략과 'NOW 전북'

21세기의 급속한 국·내외 환경 변화는 전북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전북의 미래상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더욱이 미래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전북이 나아가 할 미래상과 추진전략의 정립을 냉철하게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수용한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점에서 전라북도가 발표한 다음과 같은 미래 실천 전략과 NOW 전북은 더욱 그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

New Asian Gate 전략

전북비전의 핵심 요소로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로 전북이 동북아시아대 물류 네트워크를 선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고 있다.

추진전략으로는 (1) 2006년 3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의 완료, 2007년부터 내부토지개발 착수 사업은 정치적·지역적 측면의 사안아 아니라 바로 국책사업이며, 이것의 성공여부는 전북발전의 정도를 넘어서 바로 한국의 미래이다. (2) 군장 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지역, 고군산군도 일대를 중심으로 신산업·생산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모델도시를 조성하여 대중국·아시아 교류의 전초기지로 개발하고, (3) 서해안관광벨트의 중심거점 육성을 위해 새만금복합관광레저단지 및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 전략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으로 전북이 경제적 풍요를 구가하며, 미래 지향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략이다.

추진전략으로는 (1) 자동차부품 및 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필두로, (2) 생물 바이오산업 육성으로 전통식품의 발전 잠재력 극대화, (3) 첨단 방사선융합기술산업을 차세대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관련 산업에서의 우위 선점, (4)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 (5) T자형 벨리 구축을 통해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6) 지역고유의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7) 기업하기 좋은 전북 창출을 위한 "Occupy Jeonbuk"의 본격 추진, (8) 전통문화적 콘텐츠를 살린 문화산업 브랜드 육성, (9) 전북관광상품 브랜드 F-Tour Project의 강력 추진, (10) 권역별로 역사문화관광권, 해양레저관광권, 동부산악관광권, 전통예술관광권을 선정하여 추진, (11) 장소·스타일 마케팅을 통한 영상관광산업의 육성 등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 전략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전북 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 세계 179개국 6,000만 명 태권도인의 순례·수련의 장인 무주 태권도공원의 유치 및 조성은 태권도를 우리 전라북도를 축으로 하여 세계화시키는 광대한 미래적 사업, (2)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비롯한 지역특성을 살린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민간투자의 활성화, (3)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 이전 등에 의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발전 거점육성, (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센터 유치, (5) 서해안 해양선

사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6) 친환경 광역 경전철망 건설, (7) 항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8) 광역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1시간대 생활권 실현, (9) 철도기반 확충으로 수송능력 증대 등을 도모한다.

더불어 사는 삶의 질 향상 전략

전북 사회공동체가 웰빙 전북의 건설을 통해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삶의 질 향상 전략이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1)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과 FTA 대응, (2)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3)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복지기반 구축과 삶의 질 보장, (4) 여성의 전북발전 참여기회 확대, (5) 각계각층의 수요자 중심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의 구현, (6) 새만금 상류유역의 환경친화적 수질보전대책 추진 등이 있다.

신청사시대 행정역량 강화 전략

신청사시대를 맞이하여 추진하는 행정역량강화 전략이다.

이를 위해 (1) 신청사시대에 걸 맞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 (2) U-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일류행정 실현, (3) 행정혁신 성과 가시화로 도정 경쟁력 강화, (4) 전북발전 Think-Tank인 전북발전연구원 연구기능 강화, (5) 「법학전문대학원」유치를 통한 발전 동력 창출, (6) 인적자원의 최적 개발·활용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일등도민상 구현 등을 적극 추진한다.

나우(NOW) 전북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 건설"은 이제 전북발전의 최대 목표이다.

전북의 대외적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킴으로써 현재까지의 낙후 전북의 설움을 떨쳐내고자 정한 "나우(NOW) 전북"은 세계속에 전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브랜드 슬로건으로 "New Asian Gate(새 아시아의 관문)", "Occupy Jeonbuk(기업하기 좋은 전북)", "Wellbeing Jeonbuk(살기 좋은 전북)"의 개념을 함축하며, 5대 실천전략과 상호 교호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동북아 시대의 당당한 주역, 이것은 단지 전북이 제시하는 선언적인 미래 비전이 아니다.

전북의 민-관-기업과 대내·외의 역동적 자원들이 상호 합심하여 전북발전에 관심을 갖고, 모든 능력을 발휘하며, 책임 있는 주체자로 거듭나 3무(무관심·무능력·무책임)를 극복한다면 전북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전북의 발전적 미래상은 곧바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며, "일등 도민의 구현은 바로 일등 국민의 달성"이며, "강한 전북의 구현은 바로 강한 한국의 실현"인 것이다.

/ 초빙연구위원 안 완 기

공공기관 이전발표와 전북

공공기관이전 취지와 정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은 과도한 수도권집중과 소외된 지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종합적 해결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전 주체인 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법' 상 전국적으로 410개 기관이 분포하며, 이 가운데 약 85%인 346개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소재 346개 기관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과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과 상징성이 큰 기관 그리고 이전비용이 기대효과보다 현저히 큰 기관 등을 제외한 176개 기관이 지방이전대상기관으로 분류되었다.

현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1973·1980·1985년 등 3차례에 걸쳐 59개의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한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여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55개 기관 22,395명이 입주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금번의 이전 정책은 4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자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으로 그 씨앗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근거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단순한 일회성 이전이 아닌 지속적 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그간 대전제인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2004. 10. 21)로 동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하였고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기관의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차례에 걸쳐 정부방침변화와 발표연기가 있어 왔다. 즉, 정책설명회(전북의 경우 2005. 12. 14), 국회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체결(2005. 5. 27) 등을 거치면서 이전대상 공공기관 결정, 지방이전 방침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도별 배치기관 결정과 광역체내 혁신도시 입지 선정주체 등 핵심사항에서 혼선과 변동이 있어왔던 것이다. 또 수도권 주민과 공공기관 이해당사자, 그리고 정책의 수혜자가 될 비수도권의 지역들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시켜 왔던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플러스썸' 정책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공식 발표가 임박해 오던 2005년 초반부터 지방 분산정책에 대해 수도권의 입장이 강경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매우 구체적으로 부상되기 시작했고 계속 논의되어 왔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선적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시의적절치 못한 역기능적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점에 공감된다. 분명한 점은 공공기관 등의 지방 분산정책과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사업효과 정도가 다르고 사업효과의 발휘시

점도 엄연히 다른 정책들이어서 한 축상에 놓고 동일시되는 정책으로 간주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각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집단화될 혁신도시는 2012년 조성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외국기업의 공장신증설이나 특별구역내 국내기업의 공장설립 허용 등은 매우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경제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수도권으로의 블랙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염려를 지을 수 없다. 심지어는 현재 강구되고 있는 방안들이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들의 신호탄에 불과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선 지방육성 정책이 실효를 거두는 시기까지 완급조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맞이하는 전북

2005년 6월 24일 정부발표에 따라 전라북도는 중점유치대상 대규모기관 가운데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산업기능군으로는 농업생명기능군을 유치하게 되었다. 이들 기관들의 유치를 통해 전북은 국토의 종합적 균형개발과 국가정책사업 그리고 토지시장의 조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전략산업이자 우수한 농업여건과 연계되어 첨단농업과 생명·생물산업 중심지로 재도약을 추구하는 계기가 조성된 셈이다. 특히 한국토지공사는 전국 11개 광역체에 조성될 혁신도시 건설사업(혁신도시당 조성비용 4,000억원 추정)을 추진할 건설교통부의 선도기관으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와 더불어 타 기관보다 1년 정도 선 착공·이전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정부발표를 계기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지방 분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추진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마련에 노력을 쏟고 아울러 성찰도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지방이전을 결심하면서 지방의 경제와 생활환경이 현재보다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된다. 지방의 실질적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 달성을 위해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신중을 기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지방 분산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전종사자와 가족의 실질적 지방 정착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정부에서 제시한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북5개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유치기관들의 주요기능을 극대화하여 새만금 내부개발과 연계함으로써 대중국·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동시에 첨단농도로서의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환경·지역개발연구팀 이창현

전북의 과학기술진흥과 과학기술자문위원 활용사업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경공업시대와 중화학·전자공업시대를 지나 최근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속적인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선진 과학기술의 모방·흡수 및 습득단계를 벗어나 자력에 의한 지식 창출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혁신단계로 이행해야 한다. 그 필요성은 중국·동남아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견제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건 변화와 함께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 세계화, 지방화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에서 국가 경제사회의 성장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이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에서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자생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 과학기술 잠재력과 핵심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1999년에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999~2004)'을, 2005년에는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5~2007)'을 수립 하였다. 이 가운데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중앙정부 의존적인 과학기술진흥정책과는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것으로 지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추진역량 제고가 정책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과학기술혁신 자원이 부족하고, 지원제도가 조화롭지 못하며, 과학기술혁신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학습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및 잠재력 향상 기반도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나, 과학기술진흥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경제통상실에 과학산업과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과학기술자문위원활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라북도과학기술자문위원활용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하여 전라북도의 특성에 적합한 과학기술정책의 발굴과 기획·조정·평가 등 전라북도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¹⁾ 주요 사업 내용은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과학기술 R&D 사업 발굴, 선정 및 조정, 과

학기술 R&D 추진사업의 평가 및 평가시스템 구축, 기타 전라북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자문 수행 등이다 <표 1>

<표 1> 「전라북도과학기술자문위원활용사업」의 주요 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 과학기술자문위원 위촉·운영	•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분야별 전문가의 위촉 및 운영 • 전라북도 과학기술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활용 • 과학기술자문위원 및 과학기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과학기술 R&D사업 발굴, 선정 및 조정	• 과학기술 R&D 사업의 발굴·선정 • 전라북도 과학기술 R&D 사업의 연계·조정을 통한 과학기술 정책의 체계화 지원
• 과학기술 R&D 추진사업의 평가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정부지원 신규·기존 과학기술 R&D 추진사업 평가 • 전라북도 과학기술분야 평가시스템 구축
• 기타 전라북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자문	• 전라북도 과학기술 수요 조사 및 분석 • 과학기술 관련 간담회 개최 • 기타 전라북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

「전라북도과학기술자문위원활용사업」은 2005년 5월부터 전라북도에서 전북발전연구원에 위탁·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자문위원은 전북의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 R&D추진 사업단과 협력업체, 전라북도의 과학산업 업무추진 관계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R&D사업 혁신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산업자원부의 2005년도 지역혁신센터(RIC) 선정을 위한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혁신주체들 간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활발한 지식과 정보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자문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의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과학기술자문위원활용사업」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에 기여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과학기술혁신 여건을 극복하고 전북의 과학기술 및 산업이 진흥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주체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산업·경제연구팀 김진석

1) 이 사업은 기존에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과학기술자문관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6개 시도에 과학기술자문관을 설치·운영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자문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업무 추진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지원과 자문활동을 수행하였다.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은 2004년에 종료되었으나, 전라북도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을 위해 2005년에 자체적으로 「전라북도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활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전북발전 패러다임

6월 13일 전북의제21과 새전북신문, 전북발전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전주 코아호텔에서 열린 특별좌담,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전북발전의 뉴-패러다임」에 패널로 참석한 본 원 한영주 원장의 발표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편집자 주)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현황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주창하였고,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통해 전 세계적인 규범으로 정착하였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Brundtland Report)”을 의미하며 경제성장 일변도의 경제중심 발전전략에서 경제발전·사회통합·환경보전의 유기적인 조화와 균형 있는 통합을 갖춘 발전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GDP가 OECD 국가 중 10위권으로 고도 압축성장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했으나,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1인당 근로시간 1위, 자동차 대비 사고건수 1위, 영아사망률 8위, 고용률 21위, 평균수명 24위, 환경보전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6위, 1인당 물 공급량 14위, 1인당 폐기물배출량 24위, 재활용에너지 비율 28위, 환경지속성 지수 122위(146개국 중)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형평성결여 및 연대의식의 약화로 지역간·계층간·이념간·세대간 갈등이 확산되고 사회통합이 미흡하며,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경제성장의 압력이 환경의 자정능력을 넘어서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

전북발전의 패러다임

전북의 경우 인구가 1965년 265만명(전국대비 8.8%)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2백만이 붕괴되어 2004년 말 1,915,674명으로 전국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8%로 전국 평균(8.1%)보다 빨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인구가 19.1% 차지하는 군지역은 노인문제가 행정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인구점유율(3.9%)에 못미치는 22조 2,860억(전국의 3.1%)이며, 재정자립도가 25.9%로 전국 평균(57.2%)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중앙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역설적이지만 국가 발전 축에서 소외된 전북은 한국역사에서 독특한 지위, 맛·멋·예향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있어 풍부한 고부가가치 문화 콘텐츠 보유로 발전을 견인할 중요 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농도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발효기술, 전통식품, 신영농기법의 개발로 21세기형 생물·생명공학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간 친화적인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어 웰빙 시대가 요구하는 삶에 대한 최적 조건의 제공이 가능하며 국내 최초로 방사선 융합기술(RFT) 산업과 대체에너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융성이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인 욕구는 강해지고 있으나 산지, 해안, 도심외곽의 자연환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레저 등 개발이익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어 자연환경보전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보장 등 현세대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지체될 경우 계층간·집단간 갈등 확산 우려되고 있다. 또한 중국, 인도 등 아시아지역 인구대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심화, 자유무역경향의 강화, 석유 등 자원획득을 위한 세계적 갈등 악화로 기업간·국가간 경제적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문제의 지속적 확산으로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사업,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유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구조속에서 전북도민들의 환경보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나 백두대간 보호법과 생태자연도 등과 같은 강제적 환경규제가 전북의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로 인식되면서 도민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시대변화의 패러다임은 환경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수도권과 영남권 같은 산업화에 의한 환경오염이 파생되는 경제적 부흥이 아닌 전북도만의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 무기는 우수한 경관, 청정자연환경, 전통예술문화, 청정농산물 등과 같은 보존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조일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의 국토 중심지역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환경에 대한 투자를 부담 또는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환경정책을 경제적 시스템과 분리하여 수립·운영하는 등 경제와 환경시스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도전요인은 강하나 대응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전라북도는 신산업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구상, 새만금사업의 친환경 발전구상, 동부권 우수경관자원을 이용한 발전구상, 전통문화예술자원을 이용한 발전구상 등의 바탕엔 지속가능성이 내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과 생태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와 더불어 잘 사는 전북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 사회, 경제부문의 유기적인 조화와 공진화, 사전예방 및 실현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목표설정,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민관산학의 정책적 합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 사회, 경제부문의 유기적인 조화와 공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 실현, 생태산업이 전문화와 육성,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과 지식기반 정비,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에너지 부문의 생태적 전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고려한 장기 경제성장기반의 조성,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자원순환사회 체제 추진 등이 바탕 되어야 할 것이며, 사전예방 및 실현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목표설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온전성 유지, 지구환경보전의 책임성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와 환경의 보전과 관리 등 사회시스템 구축이 바탕 되어야 할 것이다.

/ 정리 편집부

여성정책연구소, 시·군 순회방문을 마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쉽 없는 전진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순회방문을 통해서 여성정책, 사회복지정책 담당자들을 만났다. 방문의 목적은 시·군의 현장상황을 직접 파악해 보고 그것을 정책개발에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과제와 관련해서, 또는 향후 새로운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새롭게 출범한 연구소의 존재와 역할을 알리는 기회도 겸하였다.

시작하기 전 짐작했던 대로, 여성관련 부분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주 열악한 상태였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때문에 복지부분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편이었지만 순수하게 여성정책이라고 일컬을 만한 분야는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여성정책은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업무가 아닌가 싶을 만큼 여성단체 활동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목표액을 정해 놓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는 했지만, 목표치를 달성한 자치단체는 극소수였고 이자가 낮은 까닭에 그 활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촌지역의 경우, 최근 여성정책의 주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그에 따른 보육이라거나 출산, 육아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아서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많았다.

여성인력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군 지역의 경우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위원회에 참여할 여성, 여성단체의 장을 담당할만한 여성의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여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여성자치대학과 같은 자체교육을 하고 있었고, 여타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특히 과거와 같은 대규모 강연 형태의 교육을 지양하고 소규모 워크숍을 통한 교육을 여성들이 원하고 있어서 보다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여성과 관련하여 최근 두드러지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범죄들이 군 지역에서는 보고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관련 사건에 대한 대처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외국인 여성과 관련한 업무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음식 만들기 교육, 자매결연 맺어주기 등이 있었다.

도시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 적은 자녀수, 고학력, 시간적 여유라는 조건들

이 여성들로 하여금 취업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무척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낮은 출산율로 인한 고민이 컸다. 물론 낮은 출산율은 도·농이 다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농촌 지역은 젊은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았을 뿐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게 할 것인가가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었다.

이제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는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다.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고령화의 속도와 지수가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해 있다. 경제적 상황은 열악한데 노인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노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게다가 국비지원으로 건설한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의 상시적 운영이 자치단체에 떠맡겨져 있는 까닭에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그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일거리를 통해서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재가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모든 자치단체의 관심사였다. 특히 시골 지역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차량이 여의치 않은 노인들을 위한 목욕봉사, 이발봉사활동 등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제 노인문제의 과제는 재가 복지에 많은 부분 의존해 왔던 그동안의 흐름에서 벗어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노인을 껴안고 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중증 치매 노인이나 중풍 등으로 인한 신체의 장애를 가진 노인들을 집에서 부양하기에는 가족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 요양시설의 증설과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인 부양의 의무가 여성에게 전가되어 왔던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불효자라는 딱지와 자기 삶의 희생이라는 양자택일의 길에서 방향해야 했던 여성들의 고된 마음의 짐을 털어주어야 한다.

이번 순회방문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여성정책과 여성부서의 비중이 크게 좌우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라고 할지라도 어느 지역은 생생 약동하는 활기찬 지역이 있는가 하면 무기력증에 빠진 듯이 보이는 곳도 있었다.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성담당 부서의 시대적 사명감은 대단히 막중한 것이다. 시·군을 막론하고 잠자고 있는 여성들을 깨워 일으켜서 사회발전에 동참시키는 것은 이제 회피할 수 없는 과업이 되었다. 지속적인 여성인력의 발굴과 교육·훈련을 통해서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수준에 까지 이르도록 자치단체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정책연구소장 전 정 희

주5일 근무제와 전북의 F-Tour Project

주 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이 2003년 8월말에 국회를 통과, 2004년 7월부터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다.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은 국민들의 개인생활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가활동의 증대로 국민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일관광보다 가족단위 숙박관광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87년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국내관광이 10% 이상 성장한 사례가 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여가 시간이 확대되면 여행, 스포츠, 게임 등의 체험형 여가에 대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90년대 일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해외여행, 오토캠핑, J-리그(관객은 물론 직접 즐기는 축구인구가 급증), 게임산업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특히 주말 여행문화가 확산되면서 과거 시간제약 때문에 보기만 하고 되돌아오는 획일적인 여행패턴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 레포츠, 건강·환경, 연구·학습, 농촌체험 등 특정한 이벤트와 연계된 여행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응하여 전라북도는 지역 활력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F-Tour Project'를 발표했다. 맛과 멋 그리고 소리 등 전북 전통문화와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근거로 한 다양한 지역축제의 개발과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화로서의 Festival-Tour, 맛과 건강이 조화된 웰빙 상품으로서의 Food-Tour, 청정한 자연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체험위주의 Farm Tour, 해양, 산악, 내륙지역의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는 Foot Tour의 네가지 Tour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WTO)에서 전망하는 21세기의 관광환경 조류는 세계화(Globalization)에서 지역화(Localization)로의 변화, 관광목적지 선정 및 판매망을 구축했을 때 전자기술의 영향력 발휘, 신속·편리한 여행구축, 해외여행의 일상화, 3Es(Entertainment, Excitement, Education)를 결합한 주제별 관광상품의 개발로 변화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발표한 'F-Tour Project'는 세계관광기구가 전망하는 바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새로운

주제를 찾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타지역에서도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한 관광객 유치정책들을 수립하면서 지자체간의 경쟁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차별화된 지역문화나 지역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창출하는 것은 외지인을 불러오는 선결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F-Tour Project가 무엇보다도 유희과 향락이 아닌 여가선용과 자기개발에 대한 기대, 수요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의 수립과 관련 기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홍보와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주 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F-Tour Project"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관광객의 관광성향, 전북관광에 대한 기대와 욕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장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근거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금융, 여행, IT, 유통, 제조업 등과 레저 활동을 연계한 레저 마케팅 전략으로서 복합형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예로서 홈쇼핑업체들의 경우 여행 패키지 상품의 판매를 늘리고 있는데, 이들은 레저 담당 부서를 확충하면서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관광이나 휴양 관광, 콘도 분양권 등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뷰티 마사지 투어, 골프 해외여행 등의 레저 상품들이 판매호조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기획조정팀 이승형



무주 반딧불 축제

부안 갯벌체험

전주 풍남제

전주 비빔밥

진안 마이산

중앙일보 신 국토 포럼

본 원 한영주 원장은 5월 31일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란 주제로 열린「중앙일보 신 국토포럼」에 패널로 참석하였다.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의 사회와 각 지방자치단체 발전연구원장(김용용 충남발전연구원장, 이태일 충북발전연구원장, 정희운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지역균형개발연구단장,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및 전문가(권용우 성신여대교수, 김경환 서강대교수, 김석철 명지대 건축대학장, 온영태 경희대교수, 원재무 한양대교수,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 신혜경 중앙일보 전문기자 겸 논설위원)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 원장은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은 상충한다고 보고 국가균형발전은 콘텐츠의 균형이어야 하며 수도권과 지방은 인력과 보유자원이 다르므로 그 역할과 기능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 특별좌담

본 원 한영주 원장은 6월 13일 전북의제21, 새전북신문과 본 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전북발전의 뉴-패러다임」라는 주제의 지속가능발전 특별좌담에 패널로 참석했다. 한 원장은 전북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속가능성이 내재된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산업을 이용한 발전구상,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 발전구상, 동부권 우수경관자원을 이용한 발전구상, 전통문화예술자원을 이용한 발전구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본문참조-연구원리포트②). 또한, 본 원 김보국 박사는 6월 24일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필요성과 적용”에 패널로 참석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역간 형평성과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7월 1일 본 원 안완기 박사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거버넌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패널로 참석하여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민·관·기업이 합심·협력하여 사회적 형평성·투명성·책임성·합리성을 구축하며, 많은 인적자원과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전북지역 대학새만금연구소협의회 창립

전북지역새만금연구소협의회(회장 고상순 전주대교수, 이하 전새협)는 16일 오후 전북여성회관에서 강현욱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새만금연구관련 교수 및 관련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대와 원광대 등 도내 7개 대학의 새만금연구소가 참여하는 전새협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토지이용 등 다각적인 활동방안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원활한 연구 활동과 새만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 대국민 설득논리 개발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본 원에 협회사무국을 두어 연구과제 발굴, 결과 취합, 연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이다.

전북도청 신청사 개청기념 국제심포지엄

7월 8일 도 신청사에서 열리는「신청사 개청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본 원 한영주 원장이 「기업도시 유치와 전북경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21세기 전북발전자문위원회(위원장 : 유 균)의 주관으로 열리는 심포지엄은 유 균 위원장의 개회사와 강현욱 도지사·정길진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축사에 이어, 가오후칭 중국 국가정보센터 처장과 장메이유 중국 질량보영상센터 국제부주임의 ‘새만금과 21세기 신성장산업기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이 있다. 제1세션은 신길수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홍옥희 세민환경연구소장의 ‘동북아 시대에 대비한 새만금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제2세션은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본 원 한영주 원장의 ‘기업도시 유치와 전북경제’에 대해서 토론회가 이루어진다.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소식

전라북도의 지역혁신과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6월 10일 본 원은 한국은행(전북본부)과 공동으로「전라북도의 지역혁신과 산업육성 방안」이라는 경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주대 이방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제1주제인 김선배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과 정준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전북 지역혁신 전략과 과제: 전략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제2주제인 본 원 김진석 박사의 “전북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육성 방안”에 대한 토론회로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은행 창립 제5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다.

전북발전과 지역혁신 워크숍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는 6월 29일 전주 코아호텔에서 “전북발전과 지역혁신”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혁신공로자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지역혁신주체의 혁신마인드 고양과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다.

공공기관이전과 전북발전 방향모색 토론회

7월 7일 전주 코아호텔에서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는 본 원과 공동으로「공공기관 이전과 전북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김영정 전북대 교수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속대책: 전북의 과제와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본 원 한영주 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회가 이루어진다. 토론자로는 이경옥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김기환 한국토지공사 신국토사업기획단장, 김진석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송해안 전주대 교수, 이양재 원광대 교수, 김태중 전북도민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박종훈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참석한다.

「전북발전포럼」 원고모집

- 원고성격 : 지역현안 등과 관련된 사실, 칼럼, 논문 등
- 제출기한 : 수시모집
- 제출방법 : 이메일(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디스크트와 함께 제출),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연구과제」 공모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송부해 드리며, 심사를 거쳐 공동연구참여 등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홈페이지 www.jd.re.kr(연구제안)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